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목 차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Executive Summary i

1. 연구배경 1

2.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2

3.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7

4. 시사점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02-2072-6228, hkback@hri.co.kr)

□ 산업정책실 : 이 재 호 연 구 위 원 (02-2072-6272, j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요 약>

■ 연구배경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 개념과 실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성장은 수요측면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또는 공급경제와는 달리, 성장의 공급측면을 강조한 전략이며, 정부와 민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정목표로서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1) 혁신성장의 등장배경

(저성장 경제 진입)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내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등 경쟁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속도이다.

(혁신동력의 부재)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경쟁력 지수는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7년 26위로, 같은 기간 혁신지수는 8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정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 역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는 2011년 OECD내 24위에서 2017년 29위로 하락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하는 경제행복지수 역시 최근 10여년간 30~40점대의 낮은 점수에서 횡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면서 산업 변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유통, 금융 등이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2) 혁신성장의 개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혁신성장은 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는 전략이다. 내생적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개념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성장의 동력 중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다.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은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나, 우리 경제규모를 볼 때 양적인 투자 확대는 더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1위이다. 지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거버넌스와 실행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R&D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역대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전봇대 뽑기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민간부문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창업과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스타트업 규모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 하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체감형 성장)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적 과실이 일부 고소득 계층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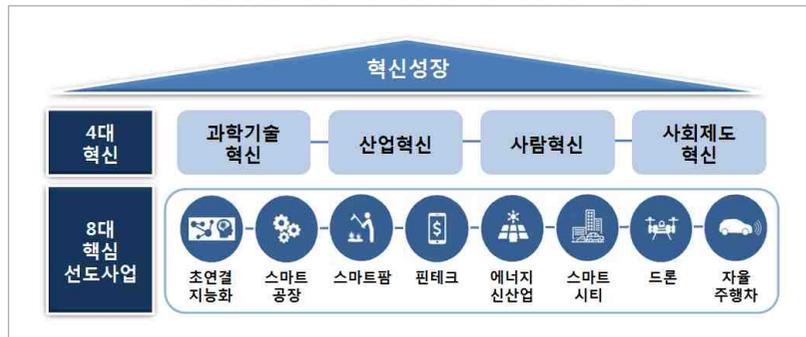
■ 시사점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계획보다는 주로 이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녹색성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계승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1. 연구배경

-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 개념과 실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①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② 혁신성장, ③ 공정경제를 제시
 - 이 중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립과 공정경제를 통한 양극화 극복은 수요측면의 정책으로 신정부 초기부터 강조
 - 반면에 혁신성장은 수요측면의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공급측면의 전략으로서 지난해 가을부터 강조되기 시작
- 혁신성장은 3대 원칙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이며, 정부와 민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도 긴밀하게 연결
 -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 사람혁신, 사회제도혁신을 혁신성장을 위한 4대 혁신으로 제시
 - 이와 함께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를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
- 본 연구는 국정목표로서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혁신성장을 위한 4대 혁신과 8대 핵심 선도사업 >



자료 : 기획재정부(2017.11.28),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관계부처합동(2018.1.2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2.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1) 혁신성장의 등장배경

① 저성장 경제 진입

-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
-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국내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후 2010년대부터 연평균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
 -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도 2016~2020년 2.7%에서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까지 하락할 전망
- 국내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속도
 - IMF에 따르면 2018년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하여 30,91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2년으로,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등 경쟁국에 비해 다소 늦은 속도

<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1인당 GDP 2만→3만 달러 소요기간 >

국가	소요기간
일본	5년 (1987→1992년)
독일	5년 (1990→1995년)
미국	9년 (1987→1996년)
한국	12년 (2006→2018년)
영국	13년 (1990→2003년)
프랑스	13년 (1990→2003년)
이탈리아	14년 (1990→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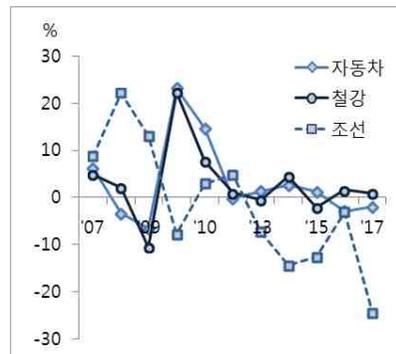
자료 : IMF(2017.10).

주 : 2017년 말 기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만 비교, 2018년은 전망치.

② 혁신동력의 부재

-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국가경쟁력과 혁신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하락
- 국내 주력산업 중 상당수가 정체 또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
 -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업을 중심으로 생산지수의 정체 또는 감소가 장기화
 - 특히 조선업은 2013년부터 생산지수가 5년 연속 감소하는 등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음
-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경쟁력과 혁신경쟁력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¹⁾가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7년 26위로 10년간 15계단 하락
 - 같은 기간 혁신지수(Innovation Index)²⁾ 역시 8위에서 18위로 10계단 하락

<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지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 전년 대비 증감률, 2017년은 추정치.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제도, 제반요소'로 정의.
2) 기업의 혁신역량,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 산학협력, 정부의 고급기술제품 구매 적극성,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인구 당 PCT 특허출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

③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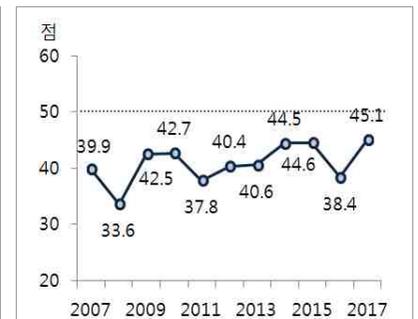
- 저성장 경제 진입과 혁신동력의 부재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 역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저성장 기조 속에서 최근 수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OECD는 GDP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원국의 삶의 질을 측정할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2011년부터 매년 발표
 -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는 2011년 24위에서 2017년 29위로 5단계 하락
-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 역시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며 크게 반등하지 않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경제행복지수 역시, 보통에 해당하는 5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0~40점대에서 횡보³⁾
 - 다만, 지난해에는 정권 교체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치인 45.1점까지 상승

<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 추이 >



자료 : OECD.
주 : 2015년까지는 36개국, 2016년부터는 38개국 중 순위, 2011년부터 조사.

< 경제행복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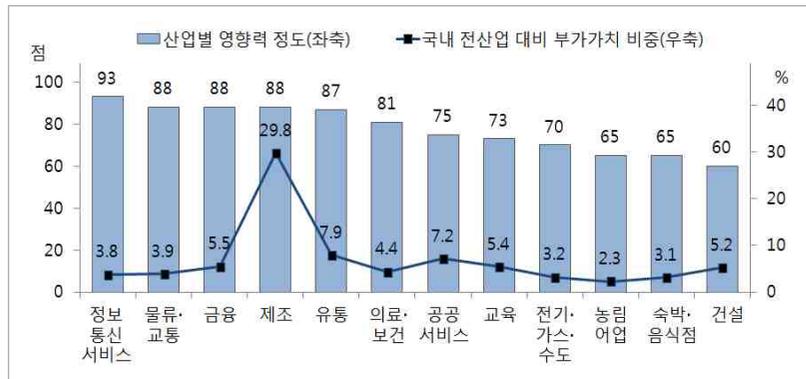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조사.
주 : 매년 하반기 조사 기준.

3) 경제행복지수는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등 5개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 자세한 내용은 전혜영 (2018.1.8), 「경제행복지수,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참조.

④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산업에 걸쳐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과 함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물류·교통, 금융, 제조, 유통, 의료·보건산업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⁴⁾
 - 국내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면서 산업 변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유통, 금융 등이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
-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 역사적으로 중세까지 유럽의 번방에 불과했던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오랜 기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
 -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소외되는 국가들은 경제·산업의 몰락과 함께 대규모의 실업을 겪을 것으로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별 영향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은행 통계(2015년 기준).
 주 : 유통, 숙박·음식점의 부가가치 비중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48인 설문 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재호·전혜영(2017.10.16),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참조.

(2) 혁신성장의 개념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혁신성장은 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
-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 또는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기술에 대한 재정정책과 규제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해법으로 부상
 - 과거 한국은 여타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 특히 자본투입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에 집중
 - 이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
 -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화두에 오르면서, 기술에 대한 재정투입과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가 정부정책의 핵심기조로 부상
-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에 있어 내생적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개념적 맥락을 공유
 - 창조경제 역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을 강조하며,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
 - 다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구체적 계획의 부재, 대기업의 무리한 참여 강제, 국정농단 세력의 입김 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실패
- 또한 성장의 동력 중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음
 -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구
 - 녹색성장 역시 실제 이행 과정에서 녹색성장 본원의 개념에 집중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 등 자본투자 중심의 토목사업으로 변질되어 정책적으로 실패
- 이하의 절에서는 이전 정부들의 성장정책 한계를 극복하되 일부 필요한 부분은 계승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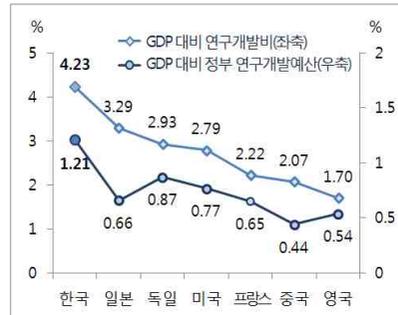
3.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①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은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지만 양적인 투자 확대는 더이상 쉽지 않은 상황,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주력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우리의 경제규모를 볼 때 양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GDP 대비 전체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 이스라엘(4.25%)에 이은 세계 2위이며, 일본(3.29%), 독일(2.93%), 미국(2.79%) 등보다 월등하게 높음
 -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1.21%로 2011년부터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 중이며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1%를 넘는 수치
- 공공 R&D의 양적 확대보다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R&D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
 - 그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비는 0.63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
 - WEF 기술수용성 지수(Technological Readiness Index)⁵⁾도 세계 29위에 불과

<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 < 주요국의 기술무역수지비 및 기술수용성 순위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ECD.
주 : 2015년 기준.

국가	기술무역수지비 (2015년)	기술수용성 순위 (2016년)
일본	6.55	15위
영국	1.93	4위
미국	1.47	6위
독일	1.34	8위
프랑스	-	21위
한국	0.63	29위

자료 : OECD, WEF.
주 :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중국은 자료 없음.

5) 국가 및 경제가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채택하는 민첩성.

②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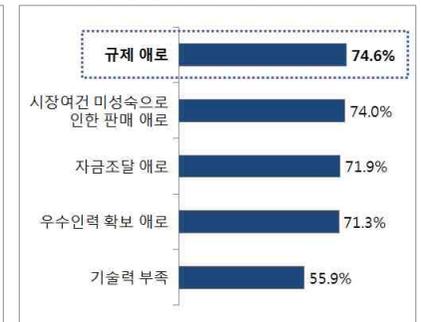
○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견인

-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
 - 대한상의에 의하면 신산업 분야에서 최근 1년간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경험한 기업의 비중이 4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특히 핀테크(70.5%)와 신재생에너지(64.7%) 분야에 규제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규제 애로를 뽑은 기업이 74.6%로 가장 높은 수치, 반면에 기술력 부족이라는 응답은 55.9%에 불과
-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
 - 역대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전봇대 뽑기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표방했으나 실제 이행은 미흡했다는 평가
 - 정부가 계획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을 충실히 이행하되, 국민 안전, 영세사업자 보호, 생명·의료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의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이행 가능성 제고

< 신산업별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 경험 > < 글로벌 경쟁시 걸림돌이 되는 요소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7.6),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
주 : 신산업 700여개 기업 대상 조사.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7.6),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
주 : 신산업 700여개 기업 대상 조사, 중복응답 허용.

③ 창업과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 지난 정부에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국내 스타트업 규모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 하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
 - 연간 신설법인의 수는 2012년 74,162개에서 2017년 98,330개, 같은 기간 벤처기업의 수는 28,193개에서 35,282개로 크게 증가
 - 그러나 신생 기업의 75%가 5년 이내에 폐업, 이는 시장 진입은 용이하지만 경쟁이 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
 -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건에 불과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과정의 구조적 변화 필요
 -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장벽으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기술개발 자금 문제이며,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수월성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
 - 중기벤처부는 지난 1월 31일, 정책자금 확대와 민간투자 규제철폐를 골자로 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여 업계의 기대감 고조, 장기적 관점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국가별 유니콘 스타트업 순위 >

순위	국가	기업 수	대표기업
1	미국	113	우버, 에어비엔비
2	중국	61	디디추싱, 샤오미
3	영국	13	글로벌 스위치, THG
4	인도	10	플립카트, 스냅딜
5	독일	3	이우토1, 오토복
6	한국	2	쿠광, 옐로모바일

자료 : CB Insights.
주 : 2018년 2월 기준, 전체 226개 기업.

< 주요국의 자금조달 수월성 비교 >

국가	은행대출 수월성	벤처캐피탈 접근성
미국	5.3	3.0
일본	5.3	3.5
독일	5.0	4.3
중국	4.5	4.1
한국	3.5	3.2
OECD 평균	4.4	3.4

자료 : WEF(2017).
주 : 7점 만점으로 평가.

6)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 「신설법인 동향」; 벤처인, 「벤처통계시스템」.

④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체감형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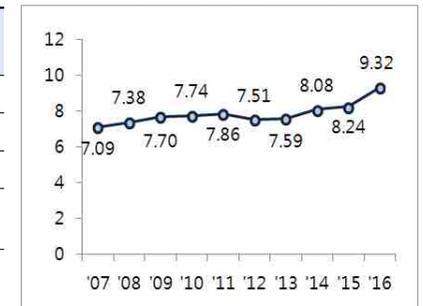
-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적 과실을 전국민이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 실현
 -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있음을 인식
 - 사회문제 해결형 R&D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 안전, 편의 등을 증진시키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
 -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기초·원천연구, 산업기술 R&D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3대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
 -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 실현
 - 소득 5분위 비율이 2007년 7.09에서 2016년 9.32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소득 상하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 성장의 과실을 전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조화된 포용적 성장 구현이 중요

< 기존 R&D vs 사회문제 해결형 R&D >

구분	기존 R&D	사회문제 해결형 R&D
목적	국가전략,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목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특징	공급자 위주	수요자 참여
주체	연구개발 부서 중심	연구개발 부서+정책부서 협업
결과	논문, 특허 등 기술 개발	새로운 사회적 제품·서비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6),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 소득 5분위 비율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주 : 1분위(상위 20%) 평균소득을 5분위(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7)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4. 시사점

-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원인이 계획보다는 이행의 문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제안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 첫째, 연구개발이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인지하되, R&D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인 향상에 주력
 -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초·원천연구,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에 집중
 - 이와 함께 통합적 연구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행정 간소화, 신뢰에 기반한 성과평가제도 마련, 연구성과의 확산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둘째,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현실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규제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감시역량에 비해 규제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수준이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⁸⁾
 - 제도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신문고,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일몰제 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행동력의 확보 필요
 - 이와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규제가 아닌 시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계하는 민주주의형 규제의 비중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
- 셋째,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과정의 구조적 변화 추진
 -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투자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벤처생태계가 지속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특히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 경주

8) 하연섭 외(2015), 「위협사회와 국가정책」.

- 넷째, 정부의 또다른 경제정책 원칙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조화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전국민이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비중을 확대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낙오되는 기업과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 다섯째,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녹색성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계승하려는 자세 필요
 -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녹색성장과 상당 부분 중첩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느라 기존 정책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계승함으로써 연속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려는 자세 필요 **HRI**

이 재 호 연구위원 (02-2072-6272, jhlee@hri.co.kr)